

2002년도

협동연구과제 지원사업 신청요강

2002. 7

한국학술진흥재단

I. 사업목적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공동연구를 선택 지원하여 연구성과가 학문경향을 선도하고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연구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고자 함

II.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5,700 백만원 (계속과제 지원분 포함)

2. 지원방향

가. 지정주제 연구과제 신설과 특정형태의 자유주제 연구과제 우대

1) 지정주제 연구과제(Top-Down) 지원 신설

- 지정주제 연구는 최근의 학술연구 경향을 선도하거나 시급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사전 선정하고 공모·지원

※ 이전의 특별정책과제지원을 별도로 공모·지원하지 않고, 지정주제 과제 지원에 통합하여 일괄 지원

2) 특정형태의 자유주제 연구과제 우대

- 국제적, 학제적, 산/학/연(관)간 공동연구는 3점의 가산점(택 1)을 부여

※ 단, 산업대 및 전문대의 산/학/연(관)간 공동연구는 5점의 가산점 부여

나. 연구 신청제도 개선

1) 연구비 신청제한액 폐지

- 연구에 필요한 실질적 연구비 신청 유도
- 소액다수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집중지원을 통한 효율성 있는 지식생산 창출

2) 연구기간 제한 폐지

- 다년과제의 경우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연구수행실적 및 연차별 연구계획서를 엄격히 평가하여 지원여부와 연구비를 결정

다. 패널중심의 심사제도 구축

-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심도 깊은 심사 유도(우송심사의 장점 내재화)

라.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

- 1) 중간발표 : 연구기간중 성과를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발표
- 2) 연구결과의 대중화 :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요약문을 작성·제출토록 함

마. 연구와 교육의 연계 강화

- 1)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학부생(3, 4학년)도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와 교육을 연계시킴
- 2) 연구결과를 강의 등 교육에 적극활용 유도

3.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1) 지정주제 연구과제 지원 : 전 학문분야

※ 목록은 별첨 참조

- 2) 자유주제 연구과제 지원 : 전 학문분야

※ 자유주제 연구과제 중 다음의 연구형태는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가) 국제적 협동연구

- 외국의 저명학자,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

나) 학제적(inter-disciplinary) 협동연구

- 학문 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상호보완적 학문간 학제간 연구과제
- 서로 다른 학문계열의 연구과제 (예 :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 유사 또는 동일계열일 경우 2개 이상의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연구과제 (예 : 한국사학과 한국철학, 수학과 물리학 등)

※ 재단 ‘연구분야분류표’(재단 홈페이지 참조)상 중분류 이상의 공동연구를 의미하며, 중분류내의 공동연구는 인정하지 않음

다) 산/학/연(관)간 협동연구

- 산/학/연(관)간 공통의 연구주제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산업현장, 연구소 및 행정기관과 학계의 상호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과제

※ 단, 산업대 및 전문대의 산/학/연(관)간 연구는 5점의 가산점 부여

☞ 단, **협력형태는 1종류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시 심사위원의 검증을 거쳐 종합심의에서 최종 결정하여 최종 득점에 가산점을 부여함

나. 지원대상

- 2인 이상의 공동연구과제(신청자격 참조)
 - 단, 국제적 협동연구과제는 3인 이상의 연구자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를 포함하여야 함
 - 편람, 사전편찬, 교재 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4.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신청상한액 제한 없음

(단, 신청연구비에 대한 심사강화로 적정연구비를 지원함)

※ 연구비 산정 기준은 **【붙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참조

☞ 연구비산정·집행기준표는 A유형과 B유형 중에서 연구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나. 지원기간 : 기간제한 없음

(다년과제인 경우 연구비는 1차년도 연구비만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는 매년 연구수행실적 평가후 지원여부와 연구비를 결정)

Ⅲ. 공모 및 신청

1. 공모 방법

- 대학의 총(학)장에게 공문 발송
-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를 통하여 일괄 공고

2.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전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 코너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하고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가. 온라인 신청

- 1) 신청방법 : 연구자가 재단의 홈페이지(www.krf.or.kr)에 접속하여 신청함
- 2) 신청(입력)내용 :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화면을 온라인 신청기간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임
- 3) 신청기간 : 2002. 8. 19 (월) ~ 8. 23 (금) 18:00 까지

나. 서류 제출

- 1) 제출방법 : 연구계획서와 연구업적은 별첨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해 일괄신청
- 2)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재단소정양식) 7부
 - 연구업적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이 게재(출판)된 학술지(저·역서) 각각의 표지, 목차, 연구업적서지사항(재단소정양식) 각 7부(각각의 연구계획서에 첨부)
- 3) 제출기한 : 2002. 8. 30 (금) 18:00까지

※ 연구계획서상 정해진 위치에 반드시 접수번호와 과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과제번호는 2002. 8. 24(토) 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아래)에 해당하는 자**
 - ①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그 소속교원
 - ②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원
 - ③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 지원 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대학의 시간강사
- ㉡ 박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연수중인 자
- ㉢ 기타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신청요건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 단, 산-학-연(관)간 협동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산업체 및 행정기관 소속 연구자와 국제적 협동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외국대학(기관)소속 연구자의 경우는 연구업적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 199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출간된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업적이 5편 이상인 연구자로서,

- 인문·사회계열(예술·체육계열 포함)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또는 ‘A&HCI 및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단, 단독 저서 및 역서 1편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연구업적 산정시 단독저서 및 역서는 논문 2편으로 인정(단, 공동저서 및 역서는 논문 1편으로 인정)

- 자연계열은 SCI급(SCI 및 SCIE 등)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등록 완료된 외국 특허 포함)이 3편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대학 및 연구소(기관포함) 발행 학술지 중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 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가 아닌 경우는 전국규모 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특수한 분야에 있어 등재(후보), A, B급 학술지 **【인문·사회계열】** 또는 SCI급 **【자연계열】** 학술지 등에 게재가 어려운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계획서 제출시 동봉하여야 함.

4.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 포함)를 지원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단, 2000년 이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및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파견 수혜자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협동연구과제지원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2. 12. 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행정요건 심사	신청자격 여부	재단
2단계	연구업적 및 계획서 심사	연구업적 평가 및 전공 심사	패널심사단
3단계	종합심의	예산 배정, 연구비조정 및 과제 선정	재단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재단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 (2단계 심사 가부 결정)

나. 제 2 단계 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주관 : 패널심사단
- 심사내용 : 연구업적의 질,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평가
- 심사항목 및 배점 : 10개 항목 100점
 - 지정주제 과제의 경우 신청자의 연구업적·계획과 지정주제와의 일치 여부를 우선 판단

심사구분	심사항목	비고
I. 연구 능력 평가 (20점)	1. 연구참여자 연구업적의 수준 (자연계열은 SCI Impact factor 반영)	
II. 연구 목적 평가 (30점)	2. 연구목적의 타당성	
	3. 연구주제의 창의성	
	4. 연구주제와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III. 연구 내용 평가 (30점)	5.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합성	
	6. 연구방법의 논리성	
	7. 참고문헌의 적정성	
IV. 결과 활용 평가 (20점)	8.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9.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10.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	

※ 적정연구비 및 기간 조정 : 연구계획서 패널심사시 실질적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 및 기간 조정

다. 제 3 단계 심사 (종합심의)

- 주관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
- 조정내용 : 분야별 예산배정, 과제별 연구비 조정
- 선정원칙 : 패널심사 점수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과제 선정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구 분		1년 연구과제	다년도 연구과제
1차	시 기	지원과제 확정후	지원과제 확정후
	금 액	지원결정액의 100%	1차년도 지원결정액의 100%
2차 이후	시 기	-	매년 계획서 평가후
	금 액	-	차년도 지원결정액의 100%

다. 연구비사용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서 체결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중앙관리해야 함
 -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연구 중간 발표

1. 발표시기 : 연구개시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
단, 다년과제의 경우 차년도 연구계획서 제출전까지
 2. 발표방법 : 발표형식은 제한 없음(학회, 대학자체, 인터넷, 기타 학술토론장 등)
- ※ 연구자는 중간발표보고서(재단 소정양식)를 연차계획서(다년과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VII. 연차별 연구계획서 제출(다년과제)

1. 제출시기 : 연차별 연구개시후 9개월이내
2. 제출서류 : 전년도 중간발표보고서 및 연구수행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연구계획서(재단 소정양식)
3. 제출방법 : 소속기관장을 통해 일괄 제출

VII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

나. 제출자료

- 1) 중간발표보고서(재단 소정양식) 1부
- 2) 연구결과보고서(재단 소정양식) 7부
-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연구비 집행정산내역 포함) 1부
- 4) 연구요약문(국·영문) 1부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1)~4)의 자료는 한글버전 3.0 이상 또는 MS워드 작성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 및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포함) 신청을 제한함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제출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2.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가.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에 대한 책무

최종연구결과물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또는 전문 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인문사회계열(예술 및 체육계열포함)	자연계열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학술지	-국제적 수준(SCI & SCIE급) 학술지
-전문학술저서	

나. 최종연구결과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연구개시후 6개월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치 아니함

다.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42-○○○○○○).”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2-042-○○○○○○).”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음

라. 최종연구결과물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학술저서로 출판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일정수준이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함

3.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국가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특허법 제29조)

IX.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교)

- 단, 아래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학회, 기타기관
 -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학
 -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 D등급 대학

2. 지원방법

가. 지원기준

- 2001년도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평가등급 적용
 - A, B, C등급 차등지원

나. 지원비율

- A등급 대학 : 과제별 선정지원액의 15% 지원
- B등급 대학 : 10% 지원
- C등급 대학 : 5% 지원

3. 지원 시기

- 선정연구비 지원시 대학으로 일괄 송금

X. 슈퍼컴퓨터 활용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학술활동 공동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단의 연구과정 수행자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일정 자원량(재단과 KISTI가 협의하여 결정)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해당분야

- 전 학문의 슈퍼컴퓨터 응용계산 과학분야

2. 활용방법

- 연구계획서상에 슈퍼컴퓨터 응용분야 활용여부를 기재한 후 과제선정 후,
 - KISTI 슈퍼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 활용시 재단과 KISTI와의 협의에 따라 무상으로 활용함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연구비 산정시 전산사용료에 슈퍼컴퓨터 사용료를 계상할 수 없음
 - 선정과제중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들은 연구목표 달성에 적정한 슈퍼컴퓨터 사용량을 KISTI에 별도로 제안하여야 함.
- ※ 단, 슈퍼컴퓨터 활용 여부가 과제선정 및 연구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활용절차

- 과제신청시(온라인신청 포함) 슈퍼컴퓨터 활용여부 확인(신청자) → 과제선정 → 선정과제 KISTI로 통보(재단) → 연구자와 KISTI의 접촉(선정자) → 연구진행

X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에서 정한 연구분야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2팀

TEL (02)3460-5583 FAX (02)3460-5590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A 유형)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 수당(재단사업중 1과제만 참여 가능)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 박사급연구원 수당 책임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박사급연구원 : 연 720만원 이내/1인당(월 6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거나 기타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제외
② 연구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구입비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의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중 택일하여 산정할 것(단, 본 사업이외의 재단 여타사업 과제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은 수당 또는 활동비를 여타사업 1과제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 2002년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B 유형)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 수당(재단사업중 1과제만 참여 가능)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생, 학부생 - 박사급연구원 수당 책임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 연 360만원 이내/1인당(월 30만원) -박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박사급연구원 : 연 720만원 이내/1인당(월 6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거나 기타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제외
② 연구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학술회의 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만큼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 등 잡비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③ 직접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재료구입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및 내구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대내·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기비 2년 이상의 내구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중 택일하여 산정할 것(단, 본 사업이외 재단 여타사업 과제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않은 수당 또는 활동비를 여타사업 1과제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음)

<양식 #1>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온라인 신청마감 후 부여 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계획서

(사업명 : 협동연구지원사업)

연구기간	1년 () / 다년도 (총 년)	1년차 신청연구비	천원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소 속 :		

☞ 연구계획서 7부중 겹표지(현재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6부는 겹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온라인 신청마감 후 부여 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연구기간	1년 () / 다년도 (총 년)		1년차 신청연구비	천원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 연구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연구계획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총 10쪽 내외로 기술하십시오.

I. 연구계획

☞ 본 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의 타당성, 국제간·학제간 등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주제와 선행연구와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설계, 방법 등의 적합성, 논리성, 구체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다년도 연구의 경우 연차별 계획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4.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해외출장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연구계획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5. 참고문헌

6. 증빙서류(별첨)

- ※ 국제간, 산학연(관)간 협동연구과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왕복교류서신, 협정서 등)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산학연(관)간 협정서는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자, 대응자금(있을 경우 표기), 양 기관장의 직인 등 필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협정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 ☞ 증빙서류는 겉표지가 포함된 연구계획서 1부에만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II. 연구수행계획

1.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 ☞ 향후 연구수행 및 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동연구에 따른 실질적인 역할 분담내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연구참여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비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갑)			
(을)			
(병)			
...			

2. 연구 추진 계획

☞ 다년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연구추진계획을 작성하십시오.

년 월 일	연구 수행 내용	비 고
2002. 11		
12		
2003. 1		
2		
3		
4		
5		
6		
7		
8		
9		
10		

3. 신청연구비

- ☞ 신청연구비 산출내역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신청연구비 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신청요강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기준표는 A유형과 B유형 중 연구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 연구비를 과다 산출한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연구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2>

※ 접수번호	On-line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십시오.
--------	--

※ 과제번호	온라인 신청마감 후 부여 받은 과제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연구업적서지사항

(2002년도 협동연구지원사업)

업적 형태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논문(저·역서, 특허) 제목	
신청연구자 구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학술지 구분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교육부 학술지등급부여 A/B등급() A&HCI 또는 SSCI급(), SCI급(), 기타()
학술지명	
발행년도(권/호 포함) 또는 특허출원일	
발행(출판)기관 또는 특허 출원국가	
SCI Impact Factor	(※ 자연계열만 기재, 최근 발표된 JCR 기준)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본 서지사항을 **On-line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 각각에 대하여 각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순서 :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 서지사항(증빙포함)→공동연구자 서지사항(증빙포함)× 7부)

※ 선택업적 증빙 제출 안내

발행기관 및 발행년도가 표기된 **논문 별쇄본의 표지 또는 저·역서의 표지 및 목차 사본**을 본 서지사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는 삭제하여 제출**)

2002년 협동연구과제 지원사업 지정주제 목록

연번	주 제 명	비고
I	정보화사회와 민주적 공공성 제고	
1	인터넷과 정치발전	
2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 스페이스의 공공성 향상 방안	
3	청소년의 주체 형성 : 대중문화, 가족, 그리고 사이버 문화	
4	지식정보화와 문화산업정책	
II	남북한 교류협력과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실현	
5	남북회담 : 7.4에서 6.15까지의 연구	
6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7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인식 연구	
III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경쟁력 개선	
8	교육시장개방과 한국의 대학교육	
9	지식정보화와 원격교육	
IV	사회통합과 새로운 사회발전모델	
10	빈곤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연구	
11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한국사회 발전모델 연구	
12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변화	
V	학술연구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13	학술연구(저술)분야에서의 표절 연구	
14	기초학문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적정인력 양성에 관한 실증 연구	
15	주요국의 학술연구지원 시스템 연구	

주제명	1. 인터넷과 정치발전
연구의 필요성	2002년 정당들의 국민참여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인터넷은 정치변화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지방동시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의 정치참여 및 선거운동은 한국민주주의의 더욱 중요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정치발전에 유용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전자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 네티즌의 정치참여를 촉발시키기 위한 방안, 나아가 인터넷 선거문화 및 정치문화의 전형을 제안하고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시급하다.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지금까지의 연구는 지금의 현상을 정의하고 설명하는데 집중되었다. 소위 전자민주주의와 e-politics를 주제로 한 연구들 대부분이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와 근접한 연구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수행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및 의회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으며, 한국정치학회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사이버정치과정에 대한 신인도 조사」 등이 있으나,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문화 및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는 아니었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input type="checkbox"/> 직접적 효과 -인터넷 정치문화, 선거문화의 발전적 정착을 통해 정치참여의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치발전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가능 -네티즌의 정치적 특성 및 정치참여의 조건 등에 대한 조사(설문조사 등)를 통해 전자민주주의의 주체를 정립하기 위한 대안 제시 가능 <input type="checkbox"/> 간접적 효과 -인터넷 정치문화의 안정화, 활성화로 인터넷문화의 건전화 추구 가능 -사이버스페이스의 참여형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현실정치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가능
기타 참고사항	<input type="checkbox"/> 2002년 지방동시선거 후보자 사이트 개설현황 및 평가 포함 <input type="checkbox"/>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및 정당 사이트의 운용현황 조사 및 평가 포함 <input type="checkbox"/> 패널형 네티즌 대상 반복적 설문조사 포함: 네티즌의 정치적 특성 분석 <input type="checkbox"/> 사이버 정치커뮤니티의 조사를 통한 유형분류 및 활동내용 분석 포함

주 제 명	2.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공성 향상 방안
연구의 필요성	<p>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와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구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소비의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정보를 생산·전달·소비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정보는 본질적으로 소비에서 비경합성이 존재한다. 즉 일단 생산이 되면 이의 소비에 몇 명이 참여하든 이미 소비하고 있는 자의 소비량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이의 수요(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소비의 증가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정보의 전달 비용이 극히 저렴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매체(예. TV, 신문, 서적 등)들과는 달리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전달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와 생산에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p> <p>①공공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전달 촉진 정보 전달 비용이 저렴하고, 소비에 비경합성이 존재하므로, 공공에 필요한 정보의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활동 중에서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공개를 장려하게 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 <p>②정보의 과도한 사유화와 적정 이윤추구의 조화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 유통 비용이 극히 저렴하며, 이의 이용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는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즉 정보 유통 권한을 지닌 자는 정보의 선별적 제공을 통하여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지닌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소비에 참여할수록 사회의 총효용이 증진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과도한 사유화와 이로 인한 정보 유통의 제약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면에 정보의 유통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정보 전달 비용의 저렴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누구나 무임승차자(free-rider)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 정보의 생산자가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하되 적정한 이윤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p> <p>③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스팸메일 방지 정보 전달 비용의 저렴으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스팸메일의 생산과 유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p> <p>요약하면,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기타 참고사항	<p>사이버스페이스는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공성 향상은 정보화 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 연구는 이를 위한 필수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스페이스 이용의 사회성, 윤리성을 제고함으로 건강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

주 제 명	3. 청소년의 주체 형성 : 대중문화, 가족, 그리고 사이버 문화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체계적인 연구는 되고 있지 않다.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종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곧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 적 관점에서 후기 근대적 일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의 중심이 되는 대중문화, 가족, 학교, 그리고 사이버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문화적 지형과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준 높은 연구를 통한 담론 그룹이 형성되어 일반 여론을 바꾸어냄과 동시에 청소년 전담 부서들이 청소년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갈 체계적 정책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 가족해체와 폭력에 대한 연구, 세대 단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인터넷의 가능성과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연구 영역들이 실제 정보사회의 본격적인 주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삶에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는 청소년을 여전히 ‘학생’의 주체로, 예비 국민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민국가시대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루려하고 있다. 오히려 ‘인디, 언더 문화’나 ‘하위 문화’ ‘대중 문화’ 영역에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아주 다른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가는 청소년을 파악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최근 초등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까지 인터넷 게임으로 무수한 가정에서 ‘자녀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중문화와 인터넷 시대에 청소년들은 사실상 활동주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이나 기성 학문 분과적 개념들로 미처 그 현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일단 근대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와 문화 산업이 주도하는 지형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을 그들의 시각에서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종합해내면서 문화 소비자이자 문화 생산자, 그리고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청소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한다.
기타 참고사항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문화관광부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별도 담당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은 조만간 보다 확실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통합,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1세기 대중문화, 정보사회에서 국가가 ‘청소년 국민’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주요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여야 할 것이다.

주 제 명	4. 지식정보화와 문화산업정책
연구의 필요성	<p>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다방면의 영향이 커지고 있어 분야별 대응 및 발전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p> <p>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문화산업은 표현방식의 다양화, 콘텐츠 발굴, 네트워크 구축, 유통구조 개선 등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산업은 지식정보화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기반의 창출, 지식창조의 촉진, 지식인 배양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결국 지식정보화의 진행과 문화산업의 발전은 모두 새로운 분야이지만 신규수요가 팽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양자는 상호시너지효과를 미칠 뿐만아니라 상승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국가발전전략상 정책대응이 중요하게 되었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종래의 연구는 지식정보화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소개나 미래 전개예측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왔다. 한편 문화산업에 대한 연구도 그 중요성이나 해외사례의 소개 및 산업적 특성을 심화시킨 연구에 국한하였다. 결국 양자간의 관계를 감안한 연계가 결여된채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되어 정책적 맥락성을 유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p> <p>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의 활성화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의 전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지식정보화에 관련된 정책연구로서는 한계가 있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지식정보와 문화산업을 연계시킴으로서 이 분야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한다.</p> <p>정보화시대의 신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 분야의 대응정책을 개발하고 국가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p> <p>관련 분야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 발전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내용을 다듬는다.</p> <p>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지식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p>
기타 참고사항	<p>문화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인 검토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에 제공하도록 한다.</p> <p>지식정보화와 문화산업의 관계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봄으로서 새로운 연구분야를 모색한다.</p> <p>향후 지식정보화의 진전을 예상하고 및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미래지향적 문화산업 정책 수요를 예상한다.</p> <p>지식정보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한다.</p>

주 제 명	5. 남북회담 : 7.4에서 6.15까지의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회담은 북한측 실무대표단의 권한 부족, 국내외적 변수로 인한 연기, 합의사항 불이행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6·15정상회담까지의 남북회담 연구를 통해, 북한의 협상전략, 남북한의 주요 회담의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 회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 관계사에서 성공한 회담과 실패한 회담 등을 구분하고, 회담성공에 영향을 미친 국제변수, 남북한의 국내적 맥락, 회담전략 등을 분석하여, 성과 있는 회담 환경 조성 전략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석(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1998), 돈 오버도프(두개의 코리아, 중앙일보, 1998) 등 전반적인 남북관계, 통일방안, 국제환경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남북회담을 연구하고 있음 ○ 구체적인 회담 사례에 대해서는 임동원(‘남북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협상전략’ 확대환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과 양운철(1995년 북경 쌀 회담: 과정과 교훈, 세종연구소, 1998)등이 있지만, 특정회담의 사례분석에 머무르고 있음 ○ 남북회담에 대한 자료집은 여러권 있지만, 7·4부터 6·15까지 전체적인 남북회담을 분석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회담사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시계열적 북한의 회담 전략 분석을 통해 북한이 대남정책에 임하는 기본전략 및 구체적인 협상패턴을 도출하여 향후 남북회담에 기초자료로 활용
기타 참고사항	

주제명	6.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한미 양국이 제안하여 시작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은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중단되었음 ○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성격 및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평화문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4자회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달라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속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연구원(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995), 송대성(한반도 평화체제, 세종연구소, 1998) 등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고 ○ 박병석(분단국가의 새로운 협력체제:다자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의미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프레스, 1996) 등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아세안 지역포럼(ARF) 등의 사례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임 ○ 그러나 4자회담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속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음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교안보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 ○ 동북아 평화포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 모델 형성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주제명	7. 동아시아 평화와 상호 역사인식 연구
연구의 필요성	<p>*동아시아 지역내 평화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동아시아 나라들간의 협력과 나아가 지역공동체 구축의 필요성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p> <p>*서세동점 이전에 동아시아는 상호간에 선린으로서의 유대와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20세기에는 침략, 대립, 갈등으로 얼룩진 분쟁지역이었다.</p> <p>*지금 세계적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는 필요한 협력체계와 공존의 바탕이 마련돼 있지 않다.</p> <p>이는 지난 20세기에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청산,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p> <p>*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역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난날 역사에서 성립된 선린 관계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p> <p>*동아시아 평화와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 역사인식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동아시아의 주로 한 중 일 세나라간에 이해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역사 인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각기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p> <p>*동아시아 각국에서 인접국가에 대해 기울인 역사연구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수준을 비교 평가한다.</p> <p>*지금까지 논란되었던 역사왜곡 문제들을 정리한다. 자국역사 중심의 서술체계가 초래하는 이웃역사에 대한 왜곡이나 편파적인 해석을 정리한다. 이런 현상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상호 인식 문제도 정리한다. 왜곡되고 편파적인 인식의 문제를 교차해서 정리한다.</p> <p>*상호 역사인식의 문제가 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인식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한다.</p> <p>*왜곡, 편파, 사실 인식의 착오, 과장 등의 문제를 초래한 요인을 정리 분석한다. 그동안 쌓인 갈등과 적대관계에 따른 현상,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요소, 이데올로기 대립, 사회혁명이나 개혁에 따른 필요, 내부통제를 위한 의도적 왜곡, 등등의 요인들을 정리 분석한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인접국가 역사는 자국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초이다.</p> <p>*인접국가에 대한 부족한 역사인식의 문제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킨다.</p> <p>*한일간의 역사왜곡문제나 이데올로기 차이에 따르는 인식의 극심한 편차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p> <p>*청소년의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에 활용될 것이며, 공존을 향한 열린 의식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p>

주제명	8. 교육시장개방과 한국의 대학교육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WTO 무역체제의 출범으로 2005년 이후 외국 상품은 물론 교육, 법률, 문화 등 서비스 분야의 대대적인 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한국사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특히 교육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의 영향은 매우 크리라고 예상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의 교육기관이 한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들 외국 기관에서 교육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따라서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교육기관의 한국진출 전망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부, 각급 교육기관, 그리고 각 가정과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교육시장의 개방문제를 다룬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이미 수행된 연구들은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주장을 담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 그러므로 교육시장의 개방이 한국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장개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비교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동시에 교육시장의 개방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 외에 긍정적 영향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긍정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국내의 각급 교육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명	9. 지식정보화와 원격교육
연구의 필요성	<p>지식산업 및 기술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도래한 지식정보화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경제, 사회, 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 공유,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며 이는 교육분야에서 평생학습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별, 성별, 계층별, 집단별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장벽은 현저히 높다. 정보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는 다시 취업 및 생산활동의 격차로 이어지며, 지식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사회적 과제 달성의 저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식정보화에 기반한 원격교육을 활용하여, 이제까지의 정보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한 HRD(인적자원개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적 정보복지 및 교육복지의 실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제는 중진국의 위치에 선 세계 속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제 3세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원격교육체제 구축하여 국내외를 통괄하는 원격교육을 통한 지식정보화 네트워크체제의 구현이 필요한 것이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지금까지의 정보사회에서의 원격교육을 통한 국내외 HRD 연구 동향을 보면 기업체나 학교 단위의 e-learning 방법론 중심 연구에 치중해 왔다. 즉 주로 연구한 분야는 산업교육 요구분석, 지식경제시대의 학습 조직, 총체적 품질본위 교육을 위한 교수체제 설계 등 산업교육의 기업체 연수나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산업인력이나 기업체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이지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가적 교육복지의 구현을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향후 정보화사회에서는 원격교육이 전 국민의 정보화 실현을 위한 국가발전의 중추이 될 것이라는 점과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에서 기술공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인 거시 관점을 결합한 연구접근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원격교육을 활용한 국가 차원 HRD체제 구축 모형 개발 <input type="checkbox"/> 원격교육에 의거한 정보소외 및 교육소외 극복방안 제시 <input type="checkbox"/> 정보소외집단의 원격교육 수혜상황 및 요구 실태 제시 <input type="checkbox"/> 향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격교육 체제 제안

주 제 명	10. 빈곤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빈곤은 전통적인 생계형 빈곤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실업자의 노숙자화, 가정파괴, 여성의 성매매, 청소년의 가정상실과 정신적 피해화, 환경파괴 등이 특정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는 빈곤현상이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 차원의 연구를 뛰어넘는 학제간 연구가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DP한국대표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빈곤실태와 빈곤퇴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도 발간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전통적 연구방법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빈곤양상을 피상적으로만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연구방법들에 따른 연구결과는 단순히 부의 재분배에만 주목하는 정책대안을 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빈곤문제에 대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내어놓지 못한다. 생산적 복지라는 공허한 개념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학제간 연구(경제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가 필요하며, 기존 빈곤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연구팀에게 연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주 제 명	11.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한국사회 발전모델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흐름은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재편하는 새로운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우선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초국가적 흐름을 심화시키고 있고, 정보화 역시 국가의 사회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민주화 과정도 국민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한편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은 실업의 증가, 노동시장의 분절 심화, 계층간 불평등의 증가,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은 중앙권력에 대한 도전, 분권화 압력의 증가 등과 같은 변화를 초래한다. ○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동시 진행에 대응하여 어떤 국가모델과 사회모델이 필요한지를 문명사의 변화라는 관점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과정을 각각 따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이 세 가지 흐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 또한 많은 연구들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과정이 개별 국가와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둘 뿐,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천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흐름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경험적·실천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가 중첩적으로 진전되는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 각 영역의 주체들이 세계사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가운데 바람직한 사회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참고사항	

주 제 명	12.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변화
연구의 필요성	<p>IT(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 지식 상품의 생산이 늘어나고, 유연생산의 세계화로 인하여 전세계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유통측면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자 화폐가 유통되어 화폐유지비용이 급감하면서 화폐가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고 있다. 소비측면에서 가상적 상징적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분배 측면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자본의 축적이 중요해지고, 경기순환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재생산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국내외적으로 볼 때 디지털 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다소 환상적인 미래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이다.(토플러, 드러커) 이러한 전망에 반대하는 연구가 일부 존재하지만, 기술발전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관적이거나 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의 연구로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조절이론의 개념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명을 포드주의 이후의 축적체제의 하나로 간주한 연구(강남훈)가 있고, 디지털 혁명이 가치관계나 공황관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측면을 분석한 연구(류동민, 김종한)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현대자본주의의 전체적인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정도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현대자본주의 재생산 구조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외환위기와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생산, 유통, 소비구조를 개혁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는 고용과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p>
기타 참고사항	<p>위와 관련하여 많은 것들이 소주제로서 연구될 수 있다. 디지털 상품의 노동가치, 지식산업과 디지털상품의 국제가치체제, 전자화폐와 금융제도, 지식산업의 국제 분업구조, 재생산구조와 지식산업, 재생산구조와 화폐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p>

주 제 명	13. 학술 연구(저술)분야에서의 표절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도 학술연구조성비에서 지급되는 연구과제부터 표절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교육부 및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받은 학술저술 및 논문에서의 표절의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제공 ○ 표절에 대한 법률적 문제, 표절 판단의 절차, 표절사례 및 판례, 입법정책 등의 각국사례 등을 종합한 표절규정 마련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국내외 자료) ○ 현지연구(필요시, 국외출장 및 해외 유학생이나 한국인 활용 가) ○ 공개토론회 개최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학술논문 및 학술저술에 대한 표절에 대한 법령 및 규정 연구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학술논문 및 저술에 대한 판례 및 사례수집 및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학술논문이나 학술서적의 표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연구 ○ 표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나 저서에서의 표절에 대한 정의 및 방지방법 ○ 표절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주 및 미주의 처리방법 - 인용부호 등의 표기방법 - 표절의 일반적인 규정 마련 예) 한 문장안에 동일하게 나열된 6개 이상의 단어 예) 학위논문의 공저에 있어서의 Second Author 이하의 표기방법(같은 논문의 어느부분을 연구하고, 을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병은 연구방법론을 제공) 예) 지도교수의 지도로 인한 학생의 저작물에 대한 지도교수의 주저자 이름으로의 발행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례 예) 학술진흥재단 등 국가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어지는 연구물의 표절에 대한 처리방안 예) 사법부 이외에서의 표절판단 연구 (학회, 별도위원회) 예) 현행법령하에서 표절자에 대한 처벌방법 중 사법부의 판단(친고죄) 외의 처벌방안 (국립대학교수의 품위유지 의무,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 등) 예) 표절방지를 위한 형행 친고죄인 저작권법의 개정 필요성 연구 예)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의 표절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표절규정 마련(이 규정은 한국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되는 연구결과 및 저술물에 대한 표절여부의 판단기준 및 처벌에 대한 규정으로서 연구비 지원시 협약에 의해 적용된다. 제1조. 표절이라 함은..... 예) 표절에 대한 별도 법령정비의 필요사항
연구결과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연구를 통해 표절 규정 마련 및 일반적인 표절의 판단자료로 활용

주 제 명	14. 기초학문분야 인력수급 전망 및 적정인력 양성에 관한 실증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문 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동 분야에 대한 투자-효과분석의 기초자료는 동 분야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및 규모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동 분야 인력수요와 공급의 기초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국내외 자료) ○ 설문조사 및 조사연구 ○ 국외현지연구 ○ 공개토론회 개최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추이, GNP대비, 국가산업구조 변화 추이 등의 변인 고려 ○ 학위별(학·석·박사) 인력의 수급 전망 ○ 기초학문 분야별 중분류, 소분류 분야별 인력 공급 진단 예) 문학 : 국어국문학, 불어불문학 수학 : 위상수학, 대수학 ○ 주요국가의 기초학문 분야의 현행 인력공급 대비 우리나라 기초학문분야 인력 공급의 비율 분석 ○ 기초학문 분야별 취업구조 실태 분석(동일 분야 취업율 포함) 예) 대학 취업율, 대학원 졸업생 취업율 ○ 향후의 기초학문 분야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체, 정부기관 등의 인력수요 전망 ○ 기초학문 분야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주요국가별 정책현황 연구 ○ 향후 수급 전망에 따르는 대학(원) 정원 분야 확대 또는 축소 분야 파악 ○ 기타 기초학문분야 인력 수급에 관한 제언
연구결과물 활용	

주 제 명	15. 주요국의 학술연구지원 시스템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 조성비는 주로 기초학문분야에 투자되는 사업이나 동 분야의 투자로 인해 생산되는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전학문을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비의 특성에 비추어 연구결과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외 학술연구지원기관의 지원체제 연구 필요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국내외 자료) ○ 설문조사 및 조사연구 ○ 국외현지연구 ○ 공개토론회 개최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 ○ 당해 국가별 연구지원 시스템 분석 국가 ⇒ 연구지원기관 ⇒ 연구자 ○ 연구비의 성격 및 규모 보조금, 기금, 출연금 ○ 심사방식(전문가, 패널 등) ○ 심사표 양식 ○ 연구결과물의 활용(저술, 학술지 게재) ○ 연구부실자에 대한 페널티 ○ 학문분야별 연구비 지원 추이(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술) ○ 연구지원대상자의 기준(교수, 일반인, 내외국인, 학회 단체 등) ○ 연구지원기관의 인적구성(신분, 보수, 학위기준, 전문성) ○ 학문후속세대의 지원(post-doc 등) ○ 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방식 (신분, 보수, 지원방식) ○ 학술지에 대한 지원 및 학술지 평가 ○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연구결과물 활용	